

3. 東北亞 情勢의 急變과 韓國外交의 課題

- 한반도 주변은 脫冷戰時代를 맞아 강대국 國益의 각축장으로 변함
- 우리의 外交政策은 冷戰期의 원칙에 얽매이는 듯한 느낌을 줌
- 韓國 外交政策은 새로운 정세에 걸맞게 유연하게 변해야 함

- 東北亞 情勢의 急變

- 脫冷戰時代를 맞아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이 냉정한 國益을 추구.
- 美國은 9월 23일 北美會談을 통해 修交 직전의 단계에 이를 전망.
- 日本은 8월 23일 北韓과 비밀회담을 갖고 北日修交 논의.
- 中國은 9월 1일 군사정전위에서 대표단을 철수시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시키려는 北韓을 지원.
- 러시아도 핵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지원에 自國產 輕水爐로 주장.
- 결과적으로 50년간 유지되어 온 한반도 문제의 當事者 解決 原則 실종과 北韓의 核武器 保有 默認을 암시하고 있어 우리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.

- 韓國政府의 對應

- 그동안의 韓國政府의 政策은 끼워넣기 전술로 요약됨.
- 즉, 北美會談에 남북한 특사교환, 핵투명성 확보에 특별사찰, 北美 연락사무소 설치에 남북대화, 경수로 지원에 한국형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식이었음.
- 이러한 상황에서 경직적인 원칙에 매달려 외교의 목표와 수단이 혼동되고 때로는 상충되는 현상을 보임.
- 남북한 긴장완화, 남북한 대화증진, 핵문제 해결 등 우리의 관심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 목표이고 수단이 되어야 하는지 또 北韓을 동반자로 보는지, 흡수 대상으로 보는지 등이 분명히 정리되어야 할 것임.

- 向後 對策

- 冷戰時代의 論理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함.
- 첫째로 韓美 공조관계를 보다 내실있게 유지해야 됨.
- 둘째로 中國은 기본적으로 北韓의 우방이며 日本도 한국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함.
- 셋째로 「國力=外交力」이라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함.
- 다행히 政府는 「核-經協」안계의 解除를 검토하는 등 對北政策에 있어서 유연한 對應으로 선회하고 있는듯 함. (이 철 순)